

# 지역상품권 예산은 역대급인데…전남 주민 “쓸 데가 없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완화에도 장성 주민 ‘쿠폰 난민’ 전락  
하나로마트·농자재점, 매출 30억 제한 막혀 사실상 상품권 사용 불가능

정부가 지난 8월 행정지침을 보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를 완화했지만 전남 주민의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으로 역대급 규모인 1조 1500억원을 확보했지만 전남 일부 주민은 ‘돈 쓸 곳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장성 서삼·북일면 주민은 올해 지급된 민생회복쿠폰 사용에 애를 먹었다.

보통 마을에는 하나로마트가 하나 씩은 있지만, 두 지역에는 없다. 북일면과 서삼면에는 각각의 지역농협이 있었지만, 인구감소 여파로 규모가 큰 농협과 합병됐다. 서삼농협의 경우 1986년, 신흥(북일)농협은 1998년 장성농협에 합병됐다.

두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장성농협 하나로마트로 가야하지만,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인 탓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이라도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읍·면지역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인해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는 기존 14개소에서 141개소로, 토론푸드직 매장은 기존 3개소에서 37개소로 총 178곳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장성농협 하나로마트는 제외됐다. 주민이 같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곳은 장성 뿐만 아니라이다.

하나로마트에서 돈을 쓰지 못하게 된 전남 주민들은, 농자재라도 사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

다. 주민이 떠나면서 동네 농자재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대규모 농자재 점포만 남게 됐는데, 연 매출 기준에 막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정철(민주·장성1) 전남도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과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과정에서 능어촌 주민 불편이 집중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감안, 국회에서는 시·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지역사랑상품권 법’을 발의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가 지역내 소비를 끌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반대와 전남처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없는 곳들의 현실 등을 감안한 행정지침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기준을 완화화면 소상공인들이 힘겨워질 수 있지만, 기준을 그대로 두면 주거지 일대에 상권이 없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세밀한 기준을 설정해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강 노벨문학상 1주년 기념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환영 만찬에서 피에르비지우(Pierre Bisou), 마야 웨스트(Maya West) 등 번역가 및 친석자들이 만찬의 시작을 알리는 건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학생 미래 손에 달렸는데…교육 관련 공약·경력 ‘부실’

### 광주·전남 광역의원 공약 이행 점검

#### <5> 교육 예산권 전문성 갖춰야

광주·전남 광역의원 83명은 내년에만 20조원의 시·도 예산권을 쥐는 데 그치지 않고(11월21일 3면 보도) 학생 급식비부터 교원 인건비, 학교 신설비까지 시·도 교육청 예산도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10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역교육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광주 3조1932억원·전남 5조5040억원 등 8조69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6명),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10명) 소속 의원들의 예비 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광주 8명·전남 20명)의 심사·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예결위에 소속된 교육위 위원(광주 1명·전남 4명)

### 광주·전남 교육재정 8조6972억원

#### 교육 방향성 맞는 예산 반영 검증 필요

명)을 제외하면 39명의 광역의원이 광주·전남 교육 예산을 임기 중 심의한 것이다. 광주시의원 13명이 한 명당 2456억원, 전남도의원 26명이 한 명당 2117억원의 교육 예산을 다른 셈이다. 교육 자치에 쓰이는 교육 재정을 교육정과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예산이라고 봤을 때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교육 재정은 광주 64조원, 전남 104조원에 달한다.

교육 예산 심의 권리인 광역의회로 옮겨진 역사는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도 교육위원회가 폐지됐다.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시작한 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가동된 것이다.

시·도 교육위원회가 가졌던 교육 예산 심의권은 광역의회가 넘겨받은 취지는 교육청 내부가 아

닌 외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다.

급식·돌봄·교원 인건비·학교 신설비와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미래 교육정책까지 지역 교육의 방향성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관련 경력이나 공약 없이 배치된 의원이 적지 않다.

박고현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활동가는 “광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한 도시를 자랑해왔지만,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청소년 노동 실태를 지적하는 학술행사를 열고도 노동교육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켰다”며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학교조리실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와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깊이가 부족한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bhj@kwangju.co.kr

## 예산 증액에 ‘전화위복’…광주운전면허시험장, AI 첨단 시험장으로

### 452억원 투입…2027년 준공 목표

예산 부족으로 규모 축소 위기에 놓였던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1급지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까지 검증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로 거듭나게 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북구 삼각동 일원에 건립 중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의 총사업비가 기존 370억원에서 452억원으로 82억원 늘어났다.

당초 이 사업은 급등한 차세비와 인건비 등 공사원가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대형 버스와 트레일러 등 모든 차량의 기능 시험이 가능한 ‘1급지’에서 일부 기능이 제외된 ‘2급지’로 축소될 처지였다.

하지만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가 변동분

79억원과 신규 시설 설계비 3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북구 삼각동 4만210㎡ 부지에 전액 국비로 조성된다. ‘AI 모빌리티 인증센터’도 들어선다.

AI센터에는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운전면허 평가 시스템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주행 평가장이 도입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상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